

교원노조의 역사성과 향후 활동방향

김 현 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처장

1. 한국 교원노조운동의 역사

한국에서 교원들의 자주적인 조직인 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투쟁은 실로 지난한 과정이었다. 1960년 4·19 이후 교사들은 이승만 정권의 부당한 교육 지배를 거부하고, 교육을 정권연장 수단으로 활용하여 심지어 교사들을 부정선거로 내몰았던 치욕적인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 질서의 창출에 동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건설했다. 당시 '한국교원노동조합 총연맹'은 창립 초기부터 교원의 사회적 책무를 통감하며 특히 비명에 쓰러져간 제자들의 피에 보답하기 위한 시대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장면 임시정부는 교사들의 이러한 교원노동조합 운동에 대해 '교원은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구태의연한 논리로 일관하면서 교원노조 인정을 거부했고, 이에 항의하여 교원노조는 합법성 쟁취를 위한 전국 투쟁을 전개했다. 교원노조의 합법성이 어느 정도 타결되어 가던 시점인 1961년 돌연한 군사 쿠데타에 의해 교원노조 활동은 전면 금지되고 주요 활동가들이 투옥되거나 학교에서 쫓겨나게 된다. 이로써 최초로 시도된 교원들의 노조 건설 투쟁은 강제로 중단되었다.

이후 역대 군사정부하에서 교원들은 공무원 신분이라

는 미명하에 일체의 노동운동과 집단행동이 금지되고, 교육은 또다시 정권의 유지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나 '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역사의 수레바퀴는 교원에게 다시금 시대정신을 요구하게 되고, 교원들은 자기 반성과 함께 피폐해진 교육현장을 살리기 위한 교육민주화 운동을 시도하게 된다. 때로는 학교단위로, 때로는 주변학교와 산발적으로 시도되던 교원들의 각종 활동은 당시 고조되고 있었던 사회민주화 운동과 결합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 1차적 계기가 1986년 '교육민주화 선언'이었다. 교사들은 1961년 이후 25년간의 침묵을 깨고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입장을 집단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교사들은 전국적 조직 결성에 착수하여 1987년 '전국교사협의회'를 결성하고, 2년 후 현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다. 전교조는 결성 초기 교육민주화를 통한 사회민주화 실현과 교육내용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거부하고, 임시 지옥으로부터 학생들을 구하자는 기치를 내걸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한국의 교원노조운동은 사회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교원이 주체가 되어 교육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하자는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운동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교원노조운동의 사회개혁적 성격으로 인하여 교원노조운동은 역대 정권으

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아 왔다.

2. 교원노조의 필요성과 역사적 정당성

교원노조의 필요성은 먼저 역대 정권의 교육에 대한 통제에서 비롯된다. 돌이켜보면, 지난 1961년 최초의 교원노조 활동이 중지된 이래로 우리 나라에서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은 정권안보 차원에서 저지되어 왔다. 그 이유는 교육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활용해 왔던 역대 정권들이 교원의 자주적 활동과 노조 결성을 정권의 속성상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과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육 내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 지배를 차단하고 국민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노조의 활동은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원들은 이제까지 비민주적 관료주의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교육행정을 민주화하여 교원의 교육에 대한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이라는 틀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 학교 운영이나 교육개혁 과정에서 교육의 일주체인 교사들의 의견이 철저히 소외되고, 심지어 상부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모든 교육정책을 강요해 왔던 교육체제에 대해 교사들이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어 이를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특히 광복 이후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한국교총이 이러한 교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법적으로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교사들은 노동조합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교원의 고용관계로 인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교원의 신분마저도 불안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교원들의 노동조합운동은 필수적이었다. '70~'80

년대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 시기를 경과하면서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실질적으로 하락하게 되고 이와 함께 교원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었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의 임면과정이 재단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매우 불안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원노조운동의 필요성은 증대되었다.

그리고 교원노조는 교원들의 교육실천과 교육개혁을 위한 제반 활동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직이다. 이는 그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전개해 왔던 총지거부 등 각종 교육비리의 추방, 사립학교의 민주화, 교육행정 체계의 개편, 입시위주 교육에서 전인교육으로의 전환, 학교현장 개혁을 위한 학교자치 실현 등을 이제 합법적인 틀을 통해 조직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교원들이 주체적인 노력으로 교육개혁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원노조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실현함과 동시에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이제까지 우리의 현실은 학생과 학부모는 일방적으로 교육정책의 대상으로 전락했으며,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아무런 통로도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교원노조의 인정으로 교원노조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그들의 교육권을 신장시키는 제반 활동을 전개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견제는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다.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활동방향

먼저 전교조는 전문적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을 통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참교육 실천, 교육개혁을 위한 대사회적 활동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조



합의 주요한 활동이 조합원의 권익보장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교조는 이러한 노조의 일반적 기능과 함께 교육을 다루는 전문직 노조로서 교육개혁을 위한 제반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수렴하여 합리적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와의 단체협상에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전교조는 또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제정 확보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학교는 아직도 대도시 중·고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50명에 이르고 있으며, 학교의 제반시설은 학생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40대 노동자들의 평균 교육비가 임금의 20%를 상회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비가 GNP의 6%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교조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대안(의무교육의 확대 실시, 의무교육기관의 시설 확충과 교육 보조자료의 제공,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의 정착, 학교 부적응아에 대한 사회교육시설 확충 등)을 마련하여 국민과 함께 정부를 압박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교육제정 GNP 6% 확보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전교조는 교사들과 함께 위기에 처한 교육을 살리기 위한 제반 활동도 준비하고 있다. 최근 학교교육

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고, 교사와 학생과의 신뢰 관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학교교육 위기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분석하여 학생과 함께 '좋은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학교현장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반드시 성과를 거두어 낼 것이다.

그리고 전교조는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 왔던 참교육 실천 활동을 강화하고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교육이념의 정립에도 노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참교육 실현을 위한 실천적 내용을 확보하기 위한 각 교과영역과 주제분과(환경교육, 통일교육, 문화교육 등)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아울러 21세기를 대비하는 새로운 교육이념의 창출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활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교육정책연구소> 설립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는 적극적인 조직확대 캠페인을 전개해 교원의 대표조직으로서 위상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이제까지 전문직단체 위주의 교원단체 활동을 탈피하고 교원노조 중심체제로 개편해 나가기 위해 1차적으로 내년까지 교원의 과반수 이상을 포괄하는 조직세를 확보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교원들에게 실제로 다가서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사업관행을 구축하고 민주적인 조합 운영을 통해 조합원들의 참여의식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4. 향후 과제

교원노조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아직도 교원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교육계 보수세력에 대한 시각 교정이다. 교원노조와 직접 교섭을 담당해 나갈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의 교육관료 그리고 교원노조의 활동과 직접 부딪히는 학교의 책임자(교장, 교감)들 모두 교원의 노사관계에 대해 별다른 전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아직도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 사학경영자는 아예 교원노조와는 상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공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교조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전체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논리로 접근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성실한 사용자로서의 역할이 결과적으로 전체 노사관계의 새로운 관행 구축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 교원노조법에서 미흡하게 인정되고 있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교원은 다른 노동자와는 달리 쟁의권이 없는 제

한된 형태의 노동기본권만 인정되고 있으며, 그것도 기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아닌 특별법 형태로 되어 있어 많은 제약요소가 있다. 또한 교원노조는 자유로운 교섭권 행사도 부분적으로 제약당하고 있으며,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제한되고 있다. 전교조는 향후 아직도 미흡한 교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한국 최초로 인정되는 복수교원노조 간의 합리적인 사업관행의 구축과 전국단위 사용자단체(사학재단 연합회)와의 새로운 교섭관행의 구축도 주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김현준**

김현준

서울대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와 영국 Warwick대학 노사관계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현재 영신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